

부패방지위원회의 활동 평가와 전망

우경종 부패방지위원회 교육홍보과장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

1990년대 이후 부패문제가 점차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1997년 『OECD 뇌물방지협약』이 제정되는 등 부패문제에 대한 규제 및 압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이 제기되면서 부패 추방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2001년 7월 드디어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 업무추진기능을 가진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가 2002년 1월 25일에 출범하게 되었다.

주요 활동내용

부방위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부패방지종합대책 기구로서의 기능을 살려, 초기 2년 간 위원회에 부여된 『부패신고 처리』 『제도 개선』 『교육·홍보』 『점검·평가』 등 4대 핵심기능 수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에 있으며,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추진 및 민·관 협력체제 확립을 위한 기본틀을 확립하였다.

중장기적으로 부패방지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2002년 7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참여정부 임기 내에 아시아 상위수준의 국가청렴도를 목표로 한 『부패방지 정책 로드맵』을 마련(2003년 9월)하여

국가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부패방지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시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부패방지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과학적으로 분석·공유하고 부패통제 4대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부패방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부방위, 법무부, 행자부, 국무조정실, 공정위, 금감위, 정부혁신위, 국세청, 경찰청, 민정수석실 등 10개 기관장이 참석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금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혁을 위해 정치 및 권력형 부패방지 제도, 지방공무원 및 교원 인사제도, 턴키공사 입찰제도 등 17건의 제도 개선을 마련하였으며, 건축 인허가, 토지 형질변경, 위생업소 허가·감독, 교육 등 4대 취약분야에 대한 심층적 부패 실태조사를 통해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나 공직윤리를 쇄신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인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각급 기관에 권고하였고, 이를 모델로 하여 2003년 5월 19일부터는 전 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에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민원인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패실태를 파악하고 유발요인을 발굴하는 『청렴도 측정』 그리고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통하여 수범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기관장의 자발

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과학적인 평가·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부패방지시책이 전국 각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4시간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범 2년 간 전국 13개 주요도시를 순회하여 『지방순회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패신고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4,251건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처리하여 77명을 기소하였고 약 85억 원을 추징 또는 회수 조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자를 불이익 처분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요구 처리, 신고자에 대한 소속기관의 보복행위 사전방지 등 신고자 보호 노력을 기울였으며, 200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3건의 부패신고에 대해 약 7천 5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깨끗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무엇보다도 부패 관용적인 국민의식과 관행의 개선이 시급하므로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부패방지 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통해 부패방지 전문 강사 인력을 확보하여,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재도 제작·배포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식개혁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부패척결을 하루 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감안, 200여 개의 분야별·지역별 시민단체와 부패방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반부패 시민의식 제고 노력과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청렴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세계 반부패 국제회의를 통해 다자간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기구와의 정책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기업 윤리경영을 권장하기 위해서도 관계 전문가·경제단체 등과 협력하여 『기업윤리지원센터』를 부방위에 설치하고 윤리경영 모범사례와 국내외 관련 법

률·제도 정보 제공, 표준윤리강령 및 윤리준법시스템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평가와 계획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에서의 부패방지대책 통합·조정 기능 △정치권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통제 △그리고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 등에 있어서는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부방위는 현행법에서 부여된 권한들을 십분 활용하여 부패통제 핵심기능을 수행해 나가면서 제도상의 미비점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정부 임기 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국가』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방자치제 실시 및 지방분권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희망 자치단체 대상 부패방지 시범지역 선정, 수범사례 확산과 인사전횡장치 마련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윤리경영 권장과 실천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표준윤리강령 제정 등을 지원하고, 지역시민단체 참여의 반부패네트워크 구축 등 시민감시활동 강화 및 보상금 지급요건 완화, 보상액 상향 조정, 보복행위자 처벌 강화 등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맺는말

앞으로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척결 없이는 더 이상 국가발전과 2만 불 시대의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시대 상황을 각별히 인식하여 참여정부 4대 국정원리인 『투명과 공정』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패방지 중심기구로서 참여정부 임기 내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국가』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